

제331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15년2월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부의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201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

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층·세대·이념에 따라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따뜻한 햇볕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눈으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 등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지만 충분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수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 각국은 적자 수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위해 사실상의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내년까지 총 1조 1400억 유로, 우리나라 예산의 4배 가까이 되는 약 14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돈 풀기, 즉 양적완화라는 다소 무리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EU는 돈을 풀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수출과 기업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7% 성장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수출주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격화된 유가 하락 이후 저유가 상태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하락은 호재입니다. 유가가 40% 떨어지게 되면 연간 400억 달러가 절감되어서 원가경쟁력이 생기고 연간 50만 원 이상의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가 하락의 어두운 면도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합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이윤이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업계는 중동지역의 공사 수주와 플랜트 수출이 줄어들어서 울상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와 이란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어서 우리의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이나 저가제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판로를 찾기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원가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나라들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힘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그만큼 대외 충격에 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크기의 쓰나미가 덮쳐올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격동 속에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고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 관료, 기업인,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등 조그마한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습니다. 나라 공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서 연 20% 이상의 임금 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영합주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 가면서 남발했습니다.

평균임금의 80%에 달하는 높은 연금,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복지 축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거부했고 정치인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건의 파기를 선동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거부한 시리자당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할 경우 그리스는 회복 불능이 되고 유로통화를 쓰는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수결손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 8000억 원, 2013년 8조 5000억 원, 2014년 11조 1000억 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전쟁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놓듯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위기를 대비해서 나라 공간을 채워 줘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우리 기업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등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 만큼의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합니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무려 재정보전 금액이 53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 이러한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가 키워졌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 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 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꺼내 쓸 권리도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를 뒤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연금 개혁이 세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어서 그러한 성공의 유전자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세대를 아울러 생각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이지만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더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수의 11.2%인 320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으로 9%이나 실제로는 100만 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적 기반이자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삶의 현장이며 국가 복지의 원천입니다.

우리 사회는 슬프게도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딸은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54%,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정규직의 과보호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아들딸, 손자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념 갈등에 따른 진영 논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상대의 패배를 나의 승리로 여기는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계는 지난 20세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려 대립했습니다. 산업화로 대표되는 할아버지 세대, 민주화로 얘기되는 아버지 세대, 진영 논리는 어찌면 숙명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좌우 대립과 흑백논리는 쉽게 사라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주역으로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의 밀레니엄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좌우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중앙집권, 상명하달의 방식을 거부하고 가부장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기피합니다. 그들은 개방적이며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미래 세대의 눈에 얼마나 허황되게 비치는지 우리는, 특히 우리 정치권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낡은 진영 논리를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국가 리더십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산

적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정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정부·국회 등 국정 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가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반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새누리당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서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 운영의 파트너십 회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입니다.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는 행위,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큰 사안인데도 각종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 법안입니다.

우리는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의과대학입니다.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큼니다. 관광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가 필요한 만큼 열린 사고로 이러한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등에서 넘쳐오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고, 국부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만 걱정하

고 장점을 보지 않는 편협한 사고로는 우리의 관광산업은 절대 육성될 수 없습니다.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회는 여야 간 대화와 합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과행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입법권의 막중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처럼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무상복지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예컨대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 미달 교사를 양산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건전한 의식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진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혹은 후퇴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복지와 증세 문제, 무상보육과 사교육비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야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가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주름살이 펴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면 결국 사회 분위기를 망치고 국민의 신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결집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의 세월 동안 눈부시게 전진해 왔습니다. 미래로 나아갔던 힘찬 걸음과 국민적 의지가 지금 여기서 꺾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해 나가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늘 낮고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정당, 국민과 동행하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무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의원(25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중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전해철	정갑윤	정세균	정수성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조명철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최봉홍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한정애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황주홍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241인)

○개의 시 재석 의원(17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석훈	강은희	경대수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권성동	권은희	권태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준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태	김우남	김재경	김정록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태호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두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박덕흠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배덕광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서영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심재철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양창영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안규백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여상규	염동열	오세성	유은혜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윤상현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이개호	원유철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윤영석	윤재옥	이개호	이군현	유의동	설훈	손인춘	송영근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윤영석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노근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이윤석	이이재	이장우	이재영	이에리사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윤석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이재오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청가 의원(19인)

강창희 문병호 박병석 송광호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상일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춘석 장윤석 전병헌
 정미경 조원진 주영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홍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출석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박명재·주호영·강석훈·서용교·강은희·조명철·이노근·김태원·이완영·박성호·홍철호 의원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신경민·유기홍·윤관석·강동원·박광온·박범계·강기정·이찬열·김광진·진선미·신정훈·이개호·김현미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강은희·김종태·장윤석·정갑윤·송영근·황인자·박명재·강석호·이만우·신학용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김도읍·황인자·김희선·김명연·신성범·권성동·홍철호·홍지만·정갑윤·이재영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이목희·홍영표·이찬열·배재정·진성준·이학영·정호준·김성주·윤관석·최규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2. 2 김용익 · 남인순 · 장하나 · 진선미 ·
김성주 · 박홍근 · 윤관석 · 박혜자 · 양승조 ·
최동익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2. 2 김용익 · 양승조 · 윤호중 · 이미경 ·
김성주 · 이학영 · 김상희 · 김윤덕 · 정호준 ·
황주홍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김용익 · 양승조 · 윤호중 · 이미경 ·
김성주 · 이학영 · 김상희 · 김윤덕 · 정호준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4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김용익 · 양승조 · 윤호중 · 이미경 ·
김성주 · 이학영 · 김상희 · 김윤덕 · 정호준 ·
황주홍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5. 2. 2 권성동 · 송영근 · 정수성 · 정문현 ·
이강후 · 최봉홍 · 황인자 · 홍철호 · 유승우 ·
김성태 · 심상정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
되었음

- 2015. 2. 2 보건복지부
- 2015. 2. 2 통일부
- 2015. 2. 2 국군사이버사령부
- 2015. 2. 2 법무부
- 2015. 2. 2 감사원
- 2015. 2. 2 헌법재판소
- 2015. 2. 2 방송통신위원회
- 2015.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상 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